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6. 17.

발 의 자 : 김민석 · 강득구 · 고영인
박성준 · 양이원영 · 양정숙
오영환 · 이원욱 · 최연숙
최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‘유류세’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,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으며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,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,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.

그런데 최근 러시아-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, 석유수출국기구(OPEC)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비율을 최대 100

분의 70까지 상향하고,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,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·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항 단서 신설).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100분의 30”을 “100분의 70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
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)가 발
생하거나 경기침체,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·외 여건에 중대한
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승
인을 얻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
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
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
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과세대상과 세율) ①·② (생략)	제2조(과세대상과 세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,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, 환경의 보전·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<u>100분의 30</u>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70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)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,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·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·

④ ~ ⑥ (생략)	<u>에너지·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다.</u>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	---